

고용부진 현황과 전망 : 수출 호조세 고용회복으로 이어질까?

2004. 3. 31

본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의 박성준 선임 연구위원과 거시경제연구센터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 3771-0013, 0046 Fax 785-0272~3

차례

I. 문제의 제기	1
II. 고용창출 둔화추세 현황	2
III. 1990년대 이후 경기와 고용의 관계	5
1. 제조업과 수출	6
2. 수출과 고용	6
3.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	9
4.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형태와 관련된 특징	12
IV. 투자부진 및 고용감소 원인	15
1. 고 임금	15
2. 전투적 노동운동	17
3.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18
4.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19
5. 지나친 정부규제	20
6.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불일치	21
V.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22

<표 차례>

<표 1> 거시적 고용관련 지표 추이	3
<표 2> 고용형태별 비중의 변화	4
<표 3> 고용규모별 각 사업장의 종사자비중	4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료(月평균)	5
<표 5> 주요 경제예측기관별 2004년 경제전망 비교	5
<표 6> 고용증가율, 수출증가율과 투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	8
<표 7> 광업·제조업 사업장규모별 종사자 및 급여추이	13
<표 8>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제조업	16
<표 9> 1990년 이후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18
<표 10> 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49개국 중)	21

<그림차례>

<그림 1> 제조업 GDP와 수출증감률(1990~2002)	6
<그림 2> 수출, 고용, 투자 증감률(1980~2002)	7
<그림 3>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10
<그림 4>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만	11
<그림 5>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	12
<그림 6> 국민경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5
<그림 7> 조사기업의 생산공장별 임금수준	17
<그림 8> 정부의 경제규제 추이	20

I. 문제의 제기

- 통상 국가경제의 운용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원천을 제공하는 것임. 우리 경제의 고용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악화되고 있음.
 - 단순히 보아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느는 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고용이나 근로소득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런 균형이 깨진 상태임.
-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 이외에는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음.
- 200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2004년의 경제상황, 특히 고용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금년도 경기회복을 예측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출의 지속적 호조세 유지를 가정하고 있음.
- 산업구조 측면에서 수출의 호조는 제조업의 호황을 의미함. 따라서 2004년 고용전망은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 제조업의 고용유발능력과 상관관계가 큼. 한국의 제조업이 경제 전체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인근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나 고용측면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런 경제구조에 바탕을 두어 분석해보면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호황이 예상되더라도 고용상황의 가시적 개선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함.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수출 호조가 고용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함.
 - 특히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자 함.

II. 고용창출 둔화추세 현황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1997년 사이 비농가의 15세 이상 인구가 21.3% 증가하였을 때 취업자가 27.3% 증가하여 취업자수 증가율이 더 높았음.
- 이에 비해,
 - 1997년부터 2003년 3/4분기 사이 15세 이상 인구가 9.8% 증가하였음에 반해 취업자증가율은 6.8%에 그쳐 그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창출추세가 현격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비농가 실업률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3%에 못 미치다가 2003년 3/4분기에 3.6%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 그 동안의 고용상황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해,

- 실망실업자(혹은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추세는 그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 사이에 12.8%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 사이 13% 증가하였음.

〈표 1〉 거시적 고용관련지표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1990	25,778	14,629	10,716	2.9
1997	31,283	18,644	12,090	2.9
1998	31,702	17,330	12,930	7.7
1999	32,210	17,765	13,113	7
2000	32,734	18,650	13,200	4.5
2001	33,204	19,125	13,264	4.1
2002	33,707	19,771	13,250	3.3
2003년 3분기	34,364	19,912	13,717	3.6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이런 양적 고용창출부진과 더불어 고용구조의 질적인 변화도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는 첫째, 상용직의 감소와 비상용직의 증가(표 2 참조)와 두 번째, 고용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규모 사업장이 줄고 소규모 사업장이 느는 추세임(표 3 참조).

-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는 취업시간별 취업자 추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즉,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취업자가 1992년 130만명에서 2002년 233만명으로 79.3% 늘어난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1,750만명(1992년)에서 1,960만명(2002년)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음.

<표 2> 고용형태별 비중의 변화

	임금고용자	상용고용자	일용고용자	임시고용자
1990	74.9	40.6	12.6	21.7
1995	72.8	42.3	10.2	20.3
1997	71.9	39.1	10.1	22.7
1998	71.0	37.7	9.9	23.3
2002	71.7	34.7	12.3	24.7
2003년 3분기	72.1	36.5	10.5	25.1

주: 임금고용자=상용직고용자+일용직고용자

상용직=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임시직=임금고용자중 상용직이 아닌 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직=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 고용규모별 각 사업장의 종사자비중

(단위: %)

	1~19명	20~99명	100~499명	500인 이상
1993	47.8	21.3	13.8	17.2
1995	49.2	21.5	14.8	14.3
1997	51.6	20.7	14.3	13.4
1999	54.9	21.0	13.2	11.0
2002	55.9	22.2	13.2	8.7

- <표 3>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규모(즉, 1~19인) 사업장의 비중 증가와 대규모 (5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 감소임.
- 인원수로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수가 1993년 584만명에서 2002년에는 816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수는 1993년 210.5만명에서 2002년 127만명으로 감소

—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러 근무조건측면에서 열악한 편임.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구분	임금	근로시간	법정의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177만원 (67%)	200.4 (102%)	14만원 (64%)	2.77% (24배)	0.94% (2.8배)

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년 9월, 정부부처합동

Ⅲ. 1990년대 이후 경기와 고용의 관계

- 200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부진이 깊어지면
서 2004년의 경제상황, 특히 고용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금년도 경기회복을 예측하고 있는데 공통적으
로 수출의 지속적 호조세 유지를 가정하고 있음(표 5 참조).

〈표 5〉 주요 경제예측기관별 2004년 경제전망 비교

	KDI	한국은행	삼성경제	LG경제	KERI
GDP	5.3	5.2	4.3	5.1	4.8
민간소비	4.5	3.5	2.9	3.9	2.5
설비투자	9.8	6.2	3.2	7.3	6.2
상품수출	12.3	13.2	8.5*	13.1	11.3
전망시점	2003/12/19	2003/12/11	2003/9/24	2004/1/7	200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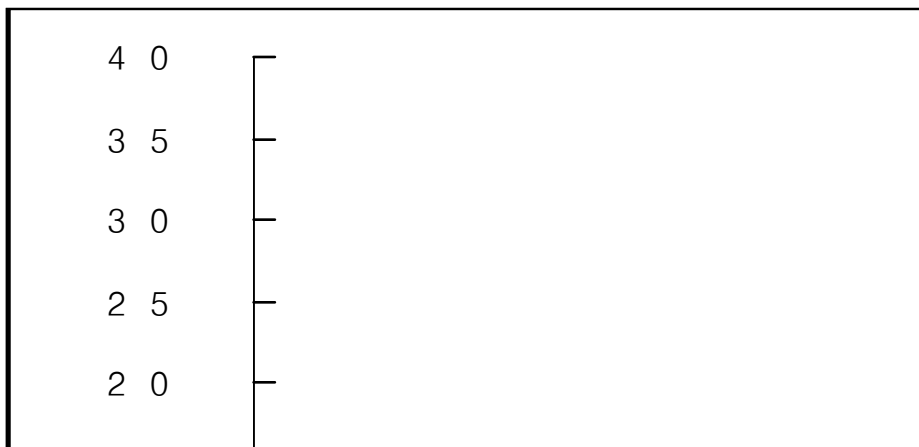
주: * 통관(달러금액)기준

- 먼저 1990년 이후 수출과 고용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가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용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제조업과 수출

- <그림 1>은 1990년 이후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을 제외하고 뚜렷한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1>이 시사하는 바는 2004년 수출호황에 바탕을 둔 경기회복은 제조업 생산호조를 의미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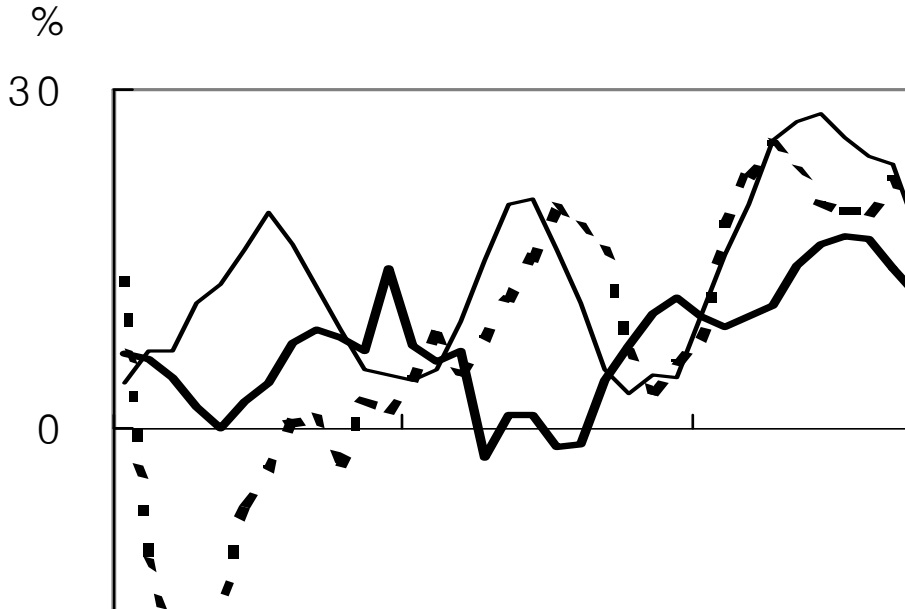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GDP와 수출증감률(1990~2002)



2. 수출과 고용

- <그림 2>는 1980년 이후 분기별 수출, 고용과 아울러 설비투자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음.

〈그림 2〉 수출, 고용, 투자 증감률(1980~2002)*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분기 이동평균치

- 첫째, 수출과 고용(취업자수)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제한적으로 (1980년대 후반 및 2000년) 동행성을 보이는 듯하나 1980년대 초나 1998년과 같이 오히려 역행성을 보인적도 많음.
 - 둘째, 고용은 수출보다 설비투자와의 더 뚜렷한 동행성을 보이고 있음. 표본 기간 전체를 통해 두 거시 변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위에서 볼 수 있는 상관관계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역시 두 가지 특이점이 있음.

〈표 6〉 고용증가율, 수출증가율과 투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

추정기간	1980년 1분기~2003년 3분기		
고용과 상품수출			
	상품수출증가율		
	t-2 期	t 期	t+2 期
t 期 고용증가율	-0.101	-0.014	0.01
고용과 설비투자			
	설비투자증가율		
	t-2 期	t 期	t+2 期
t 期 고용증가율	0.696	0.674	0.278
설비투자와 상품수출			
	설비투자증가율		
	t-2 期	t 期	t+2 期
t 期 상품수출증가율	0.214	0.24	0.05

주: <그림 2>에서와 같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분기 이동평균치 사용

- 첫째, 수출증감은 고용이나 투자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 고용과는 오히려 부(-)의 관계를 보이고 투자와 약한 동행성을 보이고 있음.
 - 둘째, 설비투자와 고용은 뚜렷한 동행성을 보임. 보다 엄밀히 말하면 설비투자의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음. 예를 들어 1/4 분기 설비투자가 증가하면 다음 2분기(2/4 및 3/4분기)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었음.
- 여기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수출호조세가 지속된다하더라도 고용이나 투자의 가시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 하지만 설비투자와 고용과의 관계는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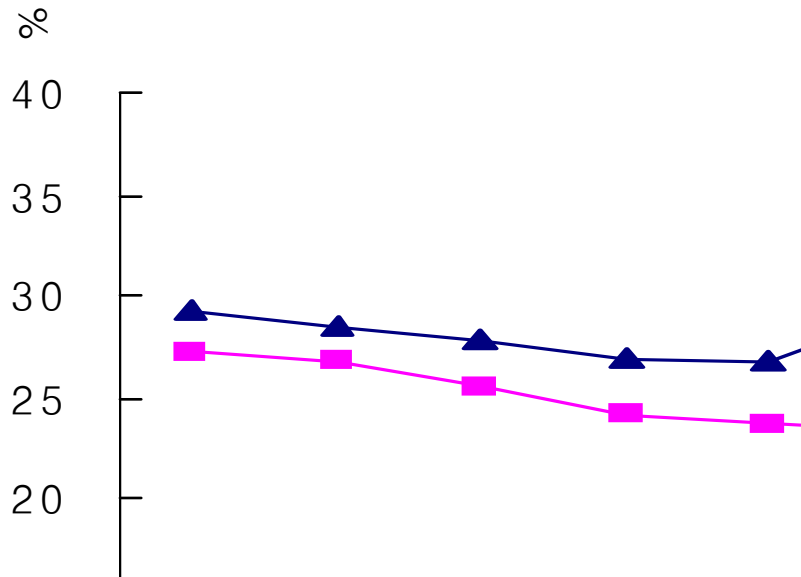
즉,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수출호조와 무관하게 설비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임.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투자증대에 정책초점을 맞춘 것은 고용 창출 관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

- 산업구조 측면에서 수출의 호조는 제조업의 호황을 의미함. 따라서 2004년 고용전망은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에 달려있음.
- 한국의 제조업이 경제 전체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나 고용측면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고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한 가지 이유임. 즉, 1990년대 들어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관련 산업의 중요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동시에 유발계수가 낮은 전기·전자 산업이 빠르게 부상하였음.
 - 이런 변화의 결과로 1980년대까지 5대 제조업종(섬유,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기계) 중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1990년대 말에는 제일 낮아졌음.
 - 이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그림 3〉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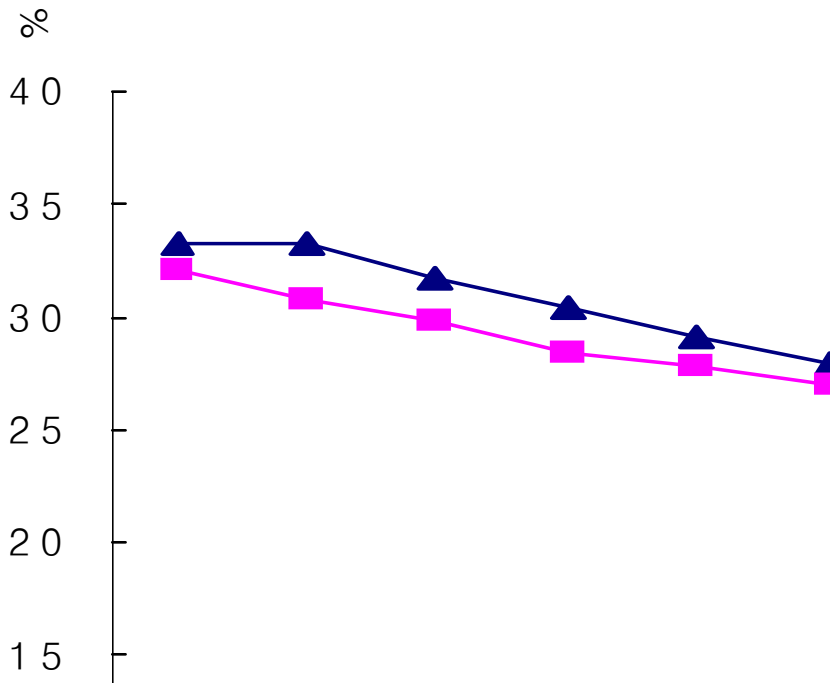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해외노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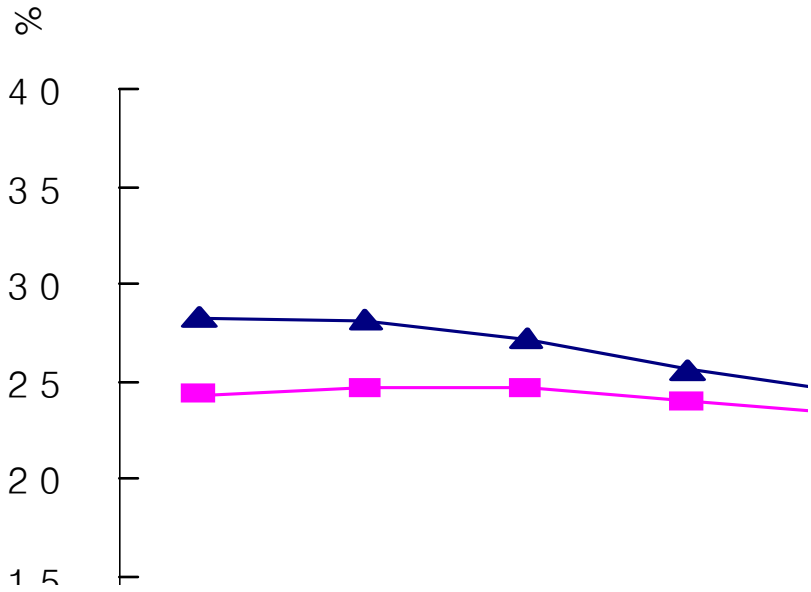
- 하지만 이런 장기적 추세인 제조업 구조변화만으로 <그림 3>의 특이 점을 설명하기는 역부족임. 이는 특히 유사한 구조변화를 겪었을 일본과 대만의 제조업 역할과 비교했을 때 나타남.
 -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두 가지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 3>을 각각 대만과 일본의 경우를 도시한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하면 뚜렷해짐.
- 이들 3개의 경제는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음.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자동화, 고용탄력성이 낮은 IT분야, 중국과 인접성 등의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 제조업의 GDP비중이 고용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한국과는 달리 1997년 이후 대만의 경우 오히려 고용비중이 더 높음.

〈그림 4〉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만



〈그림 5〉 제조업이 GDP 및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



4.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형태와 관련된 특징

- 1990년대 들어 제조업 고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대형 사업장이 빠르게 줄어들어온 것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임(표 7 참조).
- <표 7>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1990년대 초 이후 1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만 증가한 반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종사자는 줄었음. 아울러 종사자 감소폭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더욱 큼.
- 예를 들어, 20~99인의 사업장 종사자는 1990년 92만명에서 2002년 91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데 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97.5만명(1991년)에서 49만명(2002년)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표 7〉 광업·제조업 사업장규모별 종사자 및 급여추이*

(단위: 개, 천명, %, 급여: 백만원, 생산액; 조원)

사업장규모		1990년	1995년	1999년	2002년
19인 이하	사업체수	42,942	69,773	67,298	83,913
	월평균 종사자수	431.9 (14.0%)	640.1 (21.5%)	601.7 (23.8%)	736.3 (27.1%)
	연간평균급여	4.5	9.1	10.8	14.1
	생산액 및 비중	.	.	48.8 (10.1%)	76.9 (12.1%)
20-99	사업체수	22,958	23,538	21,294	23,664
	월평균 종사자수	920.9 (29.9%)	916.9 (30.8%)	829.1 (32.8%)	913.6 (33.7%)
	연간평균급여	5.3	11.1	13.2	17.6
	생산액 및 비중	.	.	98.3 (20.4%)	140.9 (22.2%)
100-499	사업체수	3,879	3,469	2,940	3,134
	월평균 종사자수	752.1 (24.4%)	657.9 (22.1%)	547.1 (21.7%)	575.5 (21.2%)
	연간평균급여	6.6	13.5	16.8	22.4
	생산액 및 비중	.	.	116.7 (24.3%)	155.1 (24.4%)
500인 이상	사업체수	676	504	357	314
	월평균 종사자수	975.1 (31.7%)	766.7 (25.7%)	548.9 (21.7%)	486.7 (17.9%)
	연간평균급여	8.4	17.5	27.2	32.4
	생산액 및 비중	.	.	217.3 (45.2%)	263.1 (41.4%)
	월평균 종사자수 합계	3080 (100%)	2981.6 (100%)	2526.8 (100%)	2712.1 (100%)

* 광업·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표본기간 중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광업 종사자의 비율은 1.9% (1990년)에서 빠르게 낮아져 2002년에는 0.6%에 그치기 때문에 제조업의 자료로 해석하여도 무리 없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2004년

- 둘째, 급여추세는 종사자 추세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1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급여가 3.1배 증가한데 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에 3.9배 증가하

였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평균 급여가 훨씬 작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증가는 매우 컸음.
- 앞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사업장은 단순 급여 이외의 인건비 지출이 소규모 사업장 보다 크게 높음. 따라서 <표 7>에서 드러난 평균 급여차이는 실제 인건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표 7>을 전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분포를 보여주는 <표 3>과 비교해보면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사업장 감소추세가 전산업에 비해 심각하게 빠른 것을 볼 수 있음.

○ 넷째, 이렇게 제조업 종사자가 빠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늘었다는 것은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음을 시사함.

-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이런 사실은 자료가 존재하는 1999년과 2002년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비중은 40%정도에 그치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0%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음.

—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대규모 사업장의 빠른 급여상승이 자동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제조업 고용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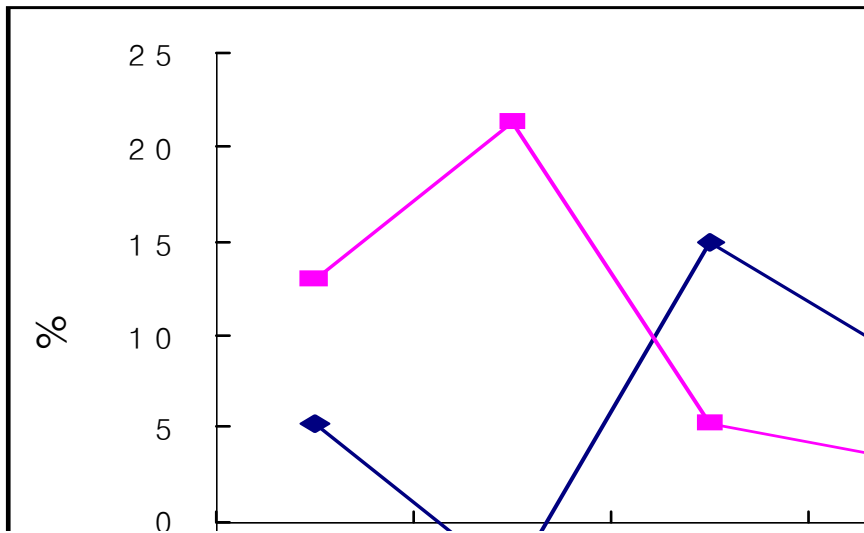
— 아울러, 2004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어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이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함.

IV. 투자부진 및 고용감소 원인

1. 고 임금

-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이후 실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0%대로 임금이 상승함.

〈그림 6〉 국민경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주: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경상GDP의 증가율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우리와의 경쟁 대상국인 대만 및 싱가포르보다도 높은 임금

〈표 8〉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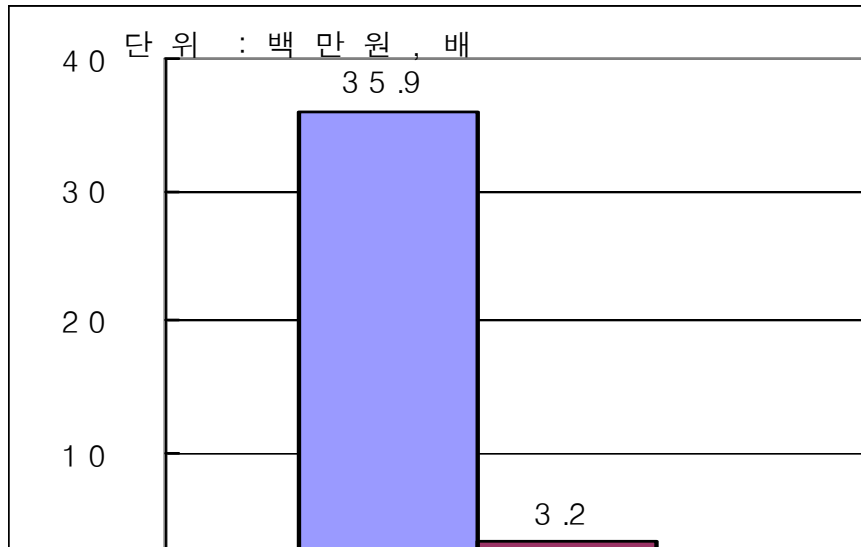
: 제조업 (미국달러기준)

	한국	대만	싱가포르
1990	3.71	3.9	3.78
1991	4.61	4.33	4.35
1992	5.22	5.05	4.92
1993	5.64	5.19	5.25
1994	6.4	5.49	6.25
1995	7.29	5.85	7.33
1996	8.22	5.87	8.27
1997	7.86	5.8	8.19
1998	5.67	5.18	7.72
1999	7.35	5.51	7.13
2000	8.48	5.85	7.42
2001	8.09	5.7	7.77

자료: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2

-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중국현지에 비해 10배, 중국을 포함한 해외현지에 비해서는 평균 5배 수준으로 조사됨.

<그림 7> 조사기업의 생산공장별 임금수준



자료: 海外進出 國內企業의 内外 賃金比較, 2003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

2. 전투적 노동운동

- 노사분규건수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의 분규건수는 1990년대 들어 최고의 수준에 이릅니다.

<표 9> 1990년 이후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시점	발생건수 (건)	손실일수 (일)	생산차질액 (억원)	수출차질액 (백만달러)
1990	322	4,487,151	14,387	314
1991	234	3,271,334	12,317	238
1992	235	1,527,612	19,586	260
1993	144	1,308,326	20,872	564
1994	121	1,484,368	15,026	550
1995	88	392,581	10,757	200
1996	85	892,987	17,983	386
1997	78	444,720	29,929	498
1998	129	1,452,096	16,363	825
1999	198	1,366,281	18,908	771
2000	250	1,893,563	16,357	636
2001	235	1,083,079	21,269	767
2002	322	1,580,424	17,177	608

주: 1) 생산차질액 및 수출차질액은 제조업 기준이며, 수출차질액은 생산차질액에 포함된 수치임.

2) 1997년도 생산 및 수출차질액은 노동법 개정관련 총 파업손실(생산 차질액: 2조 1,262억 원이며, 수출차질액: 3억 3,500만 달러)이 포함됨.

자료: 노동부·산업자원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2002년 인구 2000만명 이상인 30개국 중 30위

3.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

—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더 어려워지면서 정규직 고용보장이 더 강화되었음.

- 1998년 이전에는 정리해고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해당 기업의 사정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음. 하지만 1998년 근로기준법에 일반해고 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

이 추가되면서 그전까지 이루어지던 개별기업사정을 고려한 융통성이 없어짐.

- 이런 법제화는 그 이전보다 정리해고 요건을 획일화함으로써 정규직 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아울러 이런 조치는 노조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정리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기업의 인력조정은 거의 불가능해졌음.

— 따라서 기업은 신규 졸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인력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됨.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비상용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평가에 의하면 정규직 인력조정의 유연성은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임.

4.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 노조의 업종 최고의 임금 수준요구에 기업은 임금 인상분을 하청업체에 전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63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177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1.5배가량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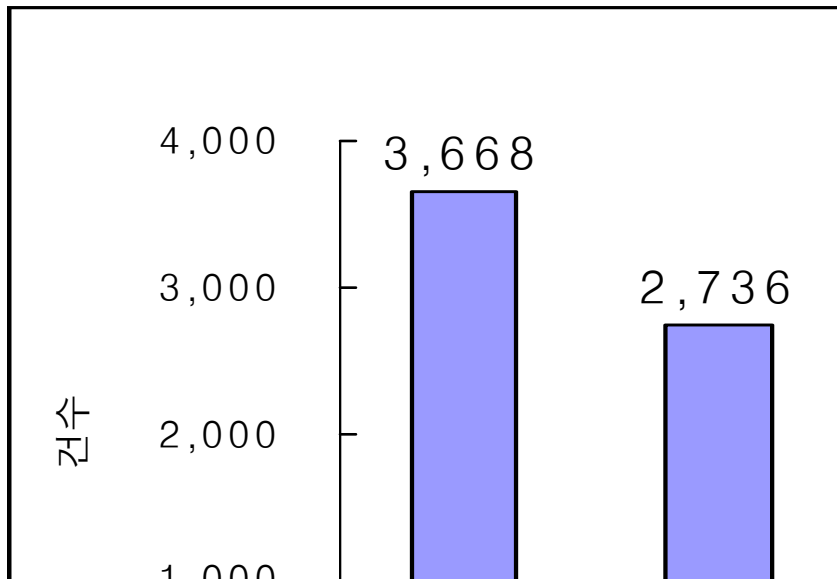
— 노조의 고용보장요구로 기업은 인력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업내 노동시장도 양극화 현상을 나타냄.

-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나친 고용보장으로 2002년 말 이후 신규채용이 없음.
- 그나마 2002년 말 신규채용 600명도 정규직 360명 그리고 240명은 비정규직임.

5. 지나친 정부규제

- 경제부처의 규제는 1998년 이후 해마다 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림 8〉 정부의 경제규제 추이



자료: '일자리 만들자' 한국경제신문 기획연재 2004년 1월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노동유연성을 가로 막는 독

소조항이 산재하고 있음.

- 노사교섭 및 파업범위 확대, 부당해고 처벌규정 존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통상임금 범주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노동규제

6.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불일치

- 비록 위에 언급한 투자부진 및 고용감소요인을 제거하더라도 청년실업은 자체 내의 구조적 문제로 쉽게 해소되지 않을 듯함.
 - 대학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맞게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어려움.
 - 2002~2006년간 IT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43만명인데, 공급은 22만명에 불과함(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2).
 -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매우 뒤쳐져 있는 실정임.

〈표 10〉 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49개국 중)

국가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지수*	8.86	7.98	7.65	6.27	5.39	4.53	4.11
순위	1	5	6	19	29	35	41

주 *: 지수는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에 부응하는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수치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 또한 청년층의 직업의식 부재를 들 수 있음.

-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비록 백수생활을 할 지라도 보수와 근무 환경이 취약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기피함.
- 특히 문제시 되는 점은 중·고교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음. 즉, 직업세계, 기업의 존재이유 및 시장의 원리 등 경제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V.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안정되어야 하고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이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어야 함.
-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함.
 - 노조는 임금 인상 및 파업을 자제하기로 선언하는 한편, 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함.
 -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 및 임금 피크제도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정부도 노사간의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지원을 제공해야 함. 즉 정부는 노조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에 가처분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소득세를 감면조치하고 기업이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시행을 추진해야 함.

-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하지만 당분간 보류하여 노사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노사간의 신뢰를 쌓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4년제 대학 다수의 직업교육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유도 정책

- 각 대학의 교과과정의 실무 위주 개편, 현장실습의 제도화, 산업체 요구의 교과과정 반영, 교수 요원의 현장 경험 정도, 창업교육의 활성화 여부,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 여부, 취업 후 유용하게 활용되는 영어나 IT관련 교육기회 부여(SKA교육), 전공통폐합이나 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활성화 등을 평가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재정적 지원함.

—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시스템(Job Outlook System)을 개발 등 노동시장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미래의 직업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통합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

— 청년층을 중소기업에 유도하기위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해야 함.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적은 임금도 문제지만 산업재해율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임.